

2021. 5. 6.(목)

- 제2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구 미 시 의 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

최근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에 사전 협의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해양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국제 기준치에 맞춰 방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이러한 결정은 일본의 자국민까지도 믿지 못하고 있다. 안전한 오염수 처리를 위해 주변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검증을 거친 후 방류해도 늦지 않으며 일본 자체 검증만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바다는 자원의 보고이며 다음 세대도 누려야 할 공동의 자산으로 전 세계가 보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다. 이러한 공동의 의무를 현재의 이익을 위해 회피하고 있는 일부 국가와 단체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지금 일본 정부에서 결정한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함께 규탄하고 철회요구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미화하여 캐릭터를 제작하는 등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자국민과 전 세계인의 눈을 가리고 왜곡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인접 국가와 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괴행위임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구미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히 맞설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단독으로 결정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주변국과의 대화와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주변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 검증단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처리 과정과 앞으로 방류하게 될 오염수의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21. 5. 6.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